

공무원 세습... 퇴직준비 휴가... 미혼직원 미팅까지

지자체 단협 해도 너무한다

〈단체협약〉

전남도내 일부 시·군이 '공무원 본인 사망시 배우자나 직계 비속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1년에 5차례 체육·문화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또 일부 시·군에서는 복지향상 차원에서 콘도·펜션 추가 확보에 나서는데는 물론, 일요일 당직 근무를 집에서 하도록 하고, 퇴직준비휴가 등 각종 휴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값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의 미팅 주선을 단협에 명시했으며, 제주는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 병가(최장 2개월)를 낼 수 있도록 했다. 14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영광과 보성, 완도, 함평 등 4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명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함평군은 단체협약에 '군은 재택근무 취지에 맞게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보성군도 읍·면의 일요일 당직을 지자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보성군은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휴가, 경조휴가 등 각종 휴가를 부활해주도록 건의할 것(77조)'도 협약에 명시했다. 단체협약을 준비중인 광주시 노조도 조합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사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줄 것과 기능 10급 폐지 등 광주시 차원에서 들어줄 수 없는 법령 사항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사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5월 영령 추모 촛불 띄우기 국립 5·18민주묘지에 세워진 '5·18 추모관'이 14일 문을 열었다. 광주 금당초교와 지매결연한 중국 천진시 평산도 소학교 어린이들이 '한줄기 눈물 코너'에서 '희망의 촛불 띄우기'를 하며 5월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

지역활성화 족쇄 '규제' 풀어라

2 기약없는 產團 조성

민선지자체들이 지방행정의 목표는 예외없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높이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규제일변도 시책에 지방정부의 경제살리기는 더디기만 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태가 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대표적이다.

시·도지사 승인 떨어져도 규제 푸는데 꼬박 1년 걸려

바다 1㎡만 포함돼도 해수부 거쳐야 중앙정부 중복 검토 행정력 낭비도

■ 지방산업 지정 권한 분류

항목	승인권자
지방산업 지정승인	330만㎡ 미만 - 도지사 330만㎡ 이상 - 건교부장관
토지이용구역 지정승인	500만㎡ 미만 - 도지사 500만㎡ 이상 - 건교부장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해수부장관(중앙연인관리심의위 심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해수부 장관
환경성 검토	유역 환경청장
농지전용협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미만 - 도지사 이상 - 농림부장관
산림전용협의	50만㎡ 미만 - 도지사 50만㎡ 이상 - 산림청장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문화재청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교부장관

지방산업 조성에는 9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 중앙 부처의 권한 아래 있는 사항이다. 면적이 330만㎡(100만평) 미만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승인은 시장·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어다보면 시·도지사의 권한은 '전무'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산단조성 과정에서 단 1㎡의 바다를 매립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반드시 해양수산부, 농림부와 협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산단 예정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끼어 있으면 해수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개발 면적이 적정한지,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관련 부처에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도 부처별로 전문이나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도 돼있어 지방산업 하나 만들려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연중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 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중복 검토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이만저만 아니다. 한시라도 빨리 기업을 가동해야 하는 사업자는 불어나는 금융비용과 경쟁력 저하에 발을 구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소한 시·도지사의 승인 범위 안에 있는 지방산단에 한해서라도 중앙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5년 12월 조순소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된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원 군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련 부처의 절차를 거치다보니 면적도 크게 줄고, 공기도 훨씬 늦춰졌다. 군내산단은 전체 면적 68만4천㎡ 가운데 당초 절반에 가까운 32만290㎡를 주변 바다를 매립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부가 해양환경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거는 바람에 매립 면적을 27만 2천720㎡로 줄여야 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완료에만 꼬박 7개월여가 흘렀다. 또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산단 좌우측에 만조 때와 간조 때 바다 밑이 드러나는 조간대(潮間帶)를 설치토록 해 선박 건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유수면매립 업무 협의가 1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장성 나노지방산단은 일반 조정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8개월이나 걸려 그만큼 지역경제 발전이 늦춰졌다. 이밖에 남양진도시 택지개발사업(1단계), 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 실시계획 과정의 경미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건교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허비됐다.

전남도내 A군 관계자는 "지방산업 한 곳 만들려면 관련 규제를 풀어가느라 꼬박 1년이 걸린다. 또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하더라도 다른 조항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장 행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명박 “여론조사 조항 조건없이 양보”

박근혜 “환영”... 오늘 한나라 상임전국위

경선 규칙을 둘러싸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한치의 양보 없이 정면 충돌하던 한나라당 내부 사태가 이 전 시장의 전격 양보로 일단 통합됐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전 시장은 14일 당내 '경선룰' 논란과 관련,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 조항을 '조건없이' 양보하기로 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무실

인 안국포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이 강재섭 대표가 지난 9일 제시한 중재안 3개항 가운데 박 전 대표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제3항 '국민투표율 하한선(67%) 보장을 통한 여론조사 반영비율 확대 조항'을

전격 양보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측근인 김무성 의원을 통해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년 5월 15일

광주의 새로운 관문 “유덕 톨게이트” 부터 시작합니다

- 광주광역시를 거점으로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광주제2순환도로의 개통으로 광주에서 호남의 동부, 중부, 서부의 연결이 한층 용이하고 빨라졌습니다.
- 광주의 부도심권(상무, 풍암, 하남, 백운동, 동광주)의 접근이 편리해졌습니다.

광주제2순환도로
 Gwangju Belt-Highway Inc.